

## 제 9 장

### 통일의지 함양과 국민합의 기반 조성

#### 제1절 통일교육

#### 제2절 대국민 통일홍보

#### 제3절 해외통일홍보

#### 제4절 민간 통일활동 지원

#### 제1절 통일교육

#####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 가.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

통일교육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각심도 인식시켜 모든 국민이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분단인식과 통일문제에 관해서 국민들간에 다양한 견해차이가 존재하여 왔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6·25사변을 겪은 기성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세대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지향하는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문제접근 방향도 다를 수 있다.

통일교육은 각계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귀일점을 발견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의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유치원·초·중·고·대)을 통해서 시도되어야 하되,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제도교육 밖에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도 보다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도교육 밖에서 이루어질 통일교육은 학교교육과 긴밀히 연계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일반사회인들에게는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균형있는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각계각층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민족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화적이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제반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국민은 각자가 민족의 성원으로서 폭 넓은 인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민족공동체적 삶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의를 지닌 통일교육은 이제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함과 아울러 이후의 민족공존공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체제역량을 증대시켜 통일의 과정뿐만이 아닌 통일 이후까지도 대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준법교육, 세계화교육 등이 포함된 포괄적 통일교육의 실시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 나.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인식 아래 정부는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건전한 북한관, 그리고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제반상황

과 통일 이후의 긴장과 갈등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셋째, 세계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원은 이러한 교육방향과 교육주제, 지도관점, 교수방법 등을 종합 정리한 통일교육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에 널리 보급하였다. 이러한 교육지침의 개발과 보급은 각급 교육기관이 남북관계의 진전 및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통일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일원은 1970년대이후 「통일안보교육용 교수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활용하여 왔으며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통일환경이 유연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민족통일구현 등 자신감과 긍지에 찬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통일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1992년 개발된 「통일교육지침서」의 주요내용은 교육목표, 중점방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참고교재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교육·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당시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각종 통일교육과정과 활동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교육시 특히 유의해야 할 기본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1995년에 펴낸 「통일교육기본방향」에서는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분단현실의 이해, 통일여건의 인식, 통일정책, 통일준비, 통일교육, 통일교육 실행상의 유의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 다.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노력

### (1) 통일대비교육 강화

대내외 통일환경의 급변으로 통일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준비

차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단이래 남북한간에 적대적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교류협력도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앞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심리적 갈등과 후유증 등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통일교육도 통일준비태세를 확립하여 통일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통일대비 역량을 배양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1996년부터 통일대비요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교육영역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감안한 통일대비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 (2) 교육교재 개발

통일교육방향을 실제 교육에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이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통일원은 기본교재로서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 2종을 개발하여 각종 통일교육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통일문제이해」는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기초 등 통일문제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이해」는 분야별 북한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타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쓴 「통일문답」을 부교재로 개발하여 여러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5년도에는 8종류의 대상별 통일교재를 발간하여 관련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대상별 교재는 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 관심분야, 수준 등을 고려, 60~70쪽 분량의 소책자 형식으로 평이하게 서술하여 교육대상자의 자발적 관심유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교재구성은 제1편에 공통 교육내용으로 ‘통일문제의 이해’를 수록하였

고, 제2편에는 대상별 내용으로 나누어 ‘북한의 체제와 이념’ (공직자 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교육 과제’ (교직자 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 (상공인 편), ‘북한경제와 주민생활’ (근로자 편),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여성 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 (대학생 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 (문화·예술인 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 (경찰·공안 편) 등을 수록하였다.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보급된 이러한 교재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대상자의 관심과 수준 등을 반영, 누구나 쉽게 읽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서술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통일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나, 현행 통일교육은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그 체제를 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통일교육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법적규범위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통일교육실시 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1997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일외무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일 등 분단국의 통일교육사례와 사계전문가 및 교육계의 의견을 깊이 참고하였다. 동 법안은 단순히 우리사회 내부의 통일역량을 미리 갖추는 일에 그치지 않고 향후 통일과정에서 핵심과제가 될 남북주민통합에도 대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 가. 일반 사회통일교육 활동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 대한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통일교육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은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별로 전문과정, 일반과정,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소속기관, 그리고 학교 등에서 각계 각층의 국민과 학생 및 군인들에게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교육내용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되며 기간은 3~6일이다.

일반과정은 공직자반, 사회기관·단체반, 대학생반, 기획·자원교육반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함양 및 교육·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3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종교인, 경수로 건설인력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교육이다.

김영삼정부가 출발한 1993년부터 1997년 11월말 현재까지 초청교육실적은 총 104,868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96년말에서 1997년초까지 1997년도 대학합격생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 통일교육은 판문점 견학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신입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확립과 통일의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교육보다는 단기간

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청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적극 실시되고 있다.

이중 1981년도부터 시작된 해외순회교육은 그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해외동포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해외교민사회에 대하여 우리 통일정책의 합리성,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경수로사업, 4자회담 등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의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5년에는 미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1996년에는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1997년에는 호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지에서 교민회 간부, 상사주재원, 종교인, 언론인, 유학생 등 해외동포사회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나. 통일대비요원 양성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일 전후 과정에서 남북한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행정요원과 교육·홍보활동에 종사할 교육요원의 양성에 착수하였다.

교과내용은 통일업무에 대한 일반적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남북관계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통일대비 기초분야와 북한실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북한이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는 통합업무 이해부분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체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교과목이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통일대비행정요원 과정은 각 부처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4주간 교육하고 있으며, 통일대비교육요원 과정은 윤리·사회과 중·고교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11월 현재 교육이수자는 1996년에 통합대비요원 59명, 1997년에 통일행정요원 275명, 통일교육요원 288명 등 도합 622명에 이른다.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직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요원은 지금의 사회·윤리과 중·고교사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전반에 통

일대비 인적자원을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 연찬교육 실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통일업무 수행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 다. 북한이탈주민대상 사회적응교육 실시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우리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 생활 안내교육, 직업훈련 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단계별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대상 교육은 1997년 7월부터 발효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연계,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라.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통일·북한문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며, 책자·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민방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 3. 학교통일교육의 지원

####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지원

##### (1) 교과과정 조정

정부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1992~현재)에 탈냉전의 대외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통일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2 도덕과 중3 사회과목에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게재하였으며, 고등학교 정치경제와 국민윤리 과목에도 1990년대 이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 남북한 유엔가입, 각종 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방안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 (2) 시범학교 지원

각급 학교의 효과적인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서울 송정초등학교 등 22개 학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이들 시범학교에 통일·북한문제 관련 사진자료, 「통일문제이해」 및 「북한이해」 등 책자, VTR 테이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의 길」 등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나. 대학사회 통일의식 함양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북한학강좌 지원,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1)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신입생들에게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남북관계현안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대학 입학전의 조기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교육은 1996년 11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총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교육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판문점 견학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으며, 또한 저명교수의 특강을 통해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토록 하고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학인의 역할과 자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대학신입생들에게는 북한 대학생 출신 탈북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개발한 「평양캠퍼스 25시」 책자를 제공하여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모습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민족의 진로와 전망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특별교양서를 금년중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2)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정부는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연구소별 사업계획과 실적을 검토, 1981년부터 대학 통일문제연구소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후 국내외 많은 대학들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1997년 11월 현재 전국 80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통일문제연구소는 교수학술세미나 개최, 북한학강좌 연구, 학생발표·토론회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 개최 등 대학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교육·홍보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학술세미나는 통일문제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 정착되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등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발표·토론회는 지도교수 책임하에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대학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편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소장들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자료의 교환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21세기 한국을 여는 통일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정부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매년 지원대학의 수를 늘리

고 있으며, 1997년에는 75개 대학에 347,000천원을 지원하였다.

### (3) 북한학 강좌 지원

북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 강좌는 서울대 등 72개 대학에 203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학생은 2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4)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젊은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사계의 권위있는 학자와 교수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부총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제2절 대국민 통일홍보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홍보의 중점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현실성과 합리성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통일대비 태세의 확립, 북한실상의 실증적·객관적 전달, 남북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등에 두고 적극적인 대국민 통일홍보를 추진해 왔다.

### 1. 정부부처간 홍보협의체 구성·운영

정부는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을 감안, 우리의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관련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올바른 전파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정책담당책임자 및 공보책임자로 홍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기획반과 공보반으로 구분, 통일문제나 외교·안보 현안 발

생시 수시로 개최되어 관련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신속히 마련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2. 홍보자료 개발·보급

### 가. 정기간행물

1990년부터 통일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일정책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모와 협조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백서」, 「남북대화」, 「주간 북한동향」,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1997년에는 대학신입생 등을 주요대상으로 통일원소식지 「한나라」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정확한 북한실상 이해와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나. 계기별 홍보자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계기 발생시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수시로 발간·배포하여 정부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관문점 방문자 및 이산가족·기업인 등 북한방문자를 위한 각종 안내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식량지원」 등 해설자료 2종 10만부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제고는 물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관련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즉응 홍보체제를 수립, 통일속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신년사 분석’, 1995년 ‘통일부총리 통일외무위 보고자료’, 1996년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 및 통일문제관련 해설자료’, 1997년 ‘황장엽 망명관련 해설자료’ 등을 발간, 통일관계전문가, 통일교육전문위원,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에 배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여론지도층에 의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언론을 통한 홍보

1989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KBS-TV의 ‘남북의 창’, MBC-TV의 ‘통일전망대’ 등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외에 대북 방송인 KBS 사회교육방송의 고정프로 ‘통일로 가는 길’에 방송해설자 선정 및 자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분단상황과 통일의지를 주제로 한 TV 공익광고(통일캠페인)를 MBC-TV를 통해 방영한 이후 1997년까지 총 4편의 TV공익광고와 1편의 라디오 공익광고를 제작, 방송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주지시킴과 함께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4.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개인용 컴퓨터(PC)의 보급확대와 이에 따른 이용자 증가 등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PC통신 등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였다.

1992년 7월 6일 (주)데이콤의 천리안Ⅱ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993년 7월 8일에는 (주)한국PC통신 HITEL을 추가하여 일반국민들이 PC통신망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관계 진전상황, 남북간 주요 합의사항, 주간 북한동향,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동향, 북한관 관람안내, 북한영화 상영 및 자료열람 등 통일·북한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통일정책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의 장을 개설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의 제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8월 11일에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ARS)을 설치, 전화통신망을 통해 통일방안, 이산가족, 남북한 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 남북한간 물자교역,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협력기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첨단 정보유통망인 인터넷을 통한 통일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유니코리아(<http://www.unikorea.go.kr>)’를 개설하여 통일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유니코리아는 최근 북한이나 친북단체들의 인터넷을 통한 왜곡된 정보선전전에 대응하고, 일반국민이나 외국인의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유니코리아는 국문과 영문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바 크게 8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내용은 첫째, 통일관련뉴스, 정부공식 발표문, 주요 북한동향 등으로 구성된 What's New, 둘째, 북한의 주요산하, 북한주민의 생활, 해외 한민족의 삶 등을 사진이나 영상자료로 제공하는 통일갤러리, 셋째, 남북관계 주요문건, 북한관련자료, 남북교류협력현황 등이 들어있는 자료실, 넷째, 남북의 현안, 통일정책,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각종 논문이 있는 통일논단, 그리고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일포럼이 있고, 통일원과 통일원 산하 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을 소개하는 난, 관련기관 정보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관련기관 난 등이 있다.

개설 이후 1997년 11월 현재 유니코리아의 총 조회건수는 3만 6천여회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난 3월 15일에는 경향신문사와 한글과 컴퓨터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의 100대 Best 웹사이트」 중에서 정치·행정·법률분야 「Best 5」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유니코리아의 개선·보완 등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997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니코리아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1997년 11월 현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구성메뉴를 수정·보완하는 등 개편작업을 실시중에 있다.

## 5. 시설물을 통한 홍보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각종 자료나 생활필수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 바로알기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증적인 통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말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북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북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 소재)도 운영하고 있다.

## 6. 기타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대국민 접촉도가 높은 홍보매체와 수단을 이용한 통일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4년과 1995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을 시판 중인 담배(88라이트)에 각각 게재, 홍보하였고, 국립영상제작소의 협조하에 통일관련 문화영화 ‘남남북녀 신혼행진곡’을 제작, 전국 각 극장에서 상영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건전한 통일관 확립 및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실상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주요행사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및 지방에서 개최한 ‘북한생활모습전’, ‘북한 의생활 및 제복류 전시회’, ‘북한 인쇄물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수렴, 표출할 수 있는 건전한 통일예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7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전국 미술전공대학생(15개 대학) 및 신예미술작가(7명) 등의 참여하에 통일벽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 제3절 해외통일홍보

#### 1.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홍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그간 우리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널리 알리고,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정신과 합리성·실현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인식시키며,

셋째, 한반도 통일문제가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국제정치사적 의의를 주지시키는 것이다.

#### 가. 홍보자료·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한국의 통일방안 해설서 및 통일문제관련 주요 계기시, 이에 대한 해설 자료 등을 영·일·중·러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하여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매분기마다 남북한 관계, 북한 연구, 국제문제, 안보분야의 영어논문 및 해설 자료집을 발간하여 외국 저명학자, 외국대학도서관, 외국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Coming Together as One」 등 통일정책 해설 및 계기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Press Information Kit」, 「Fact about Korea」 등 해외 간행물을 통해 한국의 통일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발간하여 해외동포와 외국의 연구기관, 여론주도층에게 배포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 나. KBS 국제방송 등을 통한 홍보

KBS 국제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15분간 10개 국어로 방송되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고정프로그램에 통일문제 칼럼원고를 지원하여 세계 각국에 한국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홍보외에도 통일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니코리아’는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어 유력한 국제사회 대상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요 방한 외국인사, 주한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통일정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오고 있다.

## 2.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30만 해외동포에게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민족구성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외동포대상 통일홍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통일의 당위성을 새로운 국제질서하의 민족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의 생존권 보장과 자긍심 고양의 관건임을 주지시키고,

둘째, 세계화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해외동포의 역량결집 노

력을 강화하며,

셋째, 해외동포들이 세계사의 흐름을 직시하여 한국의 발전과 북한의 개방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 해외동포 언론을 통한 통일정책 홍보

서방세계의 해외동포가 운영하는 2개국 7개 신문사와 2개국 2개 라디오 방송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매월 관계 전문가가 집필한 통일문제 칼럼을 정기 게재·방송하고 있으며, 24개국 20개 TV 방송사를 통해 통일관련 프로그램,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 고국의 생활모습 등을 담은 방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중국·러시아의 동포신문사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특집원고를 지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중, 한·러간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나. 해외동포 통일문제토론회 개최

정부는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1991년부터 매년 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3년부터 미주지역 한민족 통일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 다. 해외동포사회의 민족공동체 발전사업 지원

정부는 중국·독립국가연합지역 등 사회주의권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의식 고취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는 학술·문화·예술 사업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190만이 거주하는 중국내 조선족 동포사회에 우리의 말과 글, 정신문화의 계승을 위해 요녕신문 조선문보 주관의 ‘민들레 문학콩쿨’, 흑룡강방송의 ‘우리말 시 낭송·낭독 대회’, 북경중앙민족학원의 ‘조선족 지도자 대회’ 등 8개의 민족공동체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사할린 지역의 동포사회에 대해서는 60여개의 한글학교에 우리말과 글을 보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 라. 홍보자료의 제작·배포

해외 22개국의 동포단체, 한글학교, 종교시설 등 동포들의 왕래가 많은 220개처의 홍보협력망을 통해 통일문제 관련 각종 홍보자료를 수시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해외동포 관련 사료의 체계적 수집과 조사·기록의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발전기틀을 공고히 하고자 전 10권 3,000질의 「세계한민족총서」와 총 6부작인 「세계 한민족의 삶」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총서는 구한말부터 현재까지의 해외동포사회를 지역별 구분에 의한 총체적 접근관점에서 기술하였고, 내용은 해당국가(지역)의 개황, 한국과의 관계, 해외동포사회 현황, 해당국 동포사회의 현안과 미래전망, 해당국의 이주정책, 이민법 등으로 구성됐다.

영상자료는 해외동포사회 정착기의 고난과 역사, 현재의 삶, 미래전망 등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제1부: 중국편, △제2부: 미국편, △제3부: 일본편, △제4부: 독립국가연합편, △제5부: 중남미, 아·태, 중동·아프리카편, △제6부: 에필로그; 한민족, 통일로 미래로편으로 구성되었다.

#### 제4절 민간 통일활동 지원

##### 1. 민간 통일활동의 전개

김영삼정부는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던 민간 통일관련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관련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 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주요단체들을 살펴보면 한국발전연구원(1990년), 세계한민족평화통일

협의회(1991년), 통일시대연구소(1991년), 다물민족연구소(1991년), 한국청년 정책연구소(1992년),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1994년), 통일경제연구협회(1995년), 21세기통일봉사단(1997년)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1997년) 등이다.

통일관련단체는 그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대중통일활동단체, 조사연구단체, 남북교류협력단체, 종교계 통일활동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태로 보면 허가법인과 임의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1994년 3월 1일부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환시켰으며, 동 법률까지 1997년 3월 7일부로 폐지함으로써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킨 바 있다.

특히, 민간의 통일활동은 1995년과 1997년에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었다. 1995년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 통일활동이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안호상 불법방북 및 일부 재야단체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범민족 대회’ 등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6년과 1997년의 폭력적인 학생운동은 그 불법성과 친북성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계기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1997년도 민간통일활동의 주요 이슈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이었다. 북한의 식량난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자는 동족애에 기초하여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 2. 민간 통일활동 지원

최근 통일문제 연구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원이 허가한 법인의 수는 총 40개로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들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부총리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외에도 부총리 표창·상장 수여, 통일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일관련 자료배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통일관련단체 간부, 통일교육·홍보업무 관련 공무원 및 통일문제 담당 언론인 등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실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사회주의권 현장연수

를 지원하고 있다.